

노동정책연구  
2007. 제7권 제1호 pp.139~171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논문

# 사회적 배제 과정과 자활의 측면들: 울산 동구 빈곤층의 생애과정을 중심으로

한상진\*  
김용식\*\*

이 글은 울산 동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빈곤층의 생애과정을 통해 이들의 사회적 배제 과정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활의 경험들을 정책·제도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식별함으로써 사회정책에 대한 함의를 모아 본다. 이를 위해 먼저 연구방법을 설명하고 자료의 성격에 관해 밝힌다. 다음으로 예비적 고찰로서 사회적 배제에 대응한 자활의 차원들을 자족, 자조, 자주로 구분해 보고 자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살핀 다음,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전기의 구성 전략을 제시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이들의 생애과정에 사회적 배제의 특성과 이에 대처하는 자활의 측면들이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를 서술하고, 이와 같은 해석에 근거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핵심용어 : 사회적 배제, 자활, 울산지역, 빈곤층, 생애과정

## I. 머리말

복지국가의 후퇴라는 전 세계적 경향과 아울러, IMF 사태 이후 실업의 장기화는 빈곤층의 노동을 통한 자립을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켜 왔다. 이러한 정책의 선회는 빈곤층 자체의 성격 변화와도 관련되는 것인데, 그

논문접수일: 2006년 9월 25일, 심사의뢰일: 10월 18일, 심사완료일: 2007년 1월 16일

\* 울산대 사회과학부 교수(sjhahn@ulsan.ac.kr).

\*\* 울산동구 자활후견기관장(folabor@hanmail.net).

연장선 위에서 최근에는 빈곤층을 둘러싼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sup>1)</sup> 개념의 적용(박병현·최선미, 2001; 심창학, 2004; 남춘호, 2006 등)이나 이들의 생애과정을 살피는 질적 접근(한국도시연구소, 2004; 장원봉 외, 2005; 남기철 외, 2005 등)이 꽤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영국 등의 ‘제3의 길’ 노동연계복지 전략에 영향을 받은 한국형 생산적 복지 정책인 자활(self-support)을 둘러싸고도 많은 분석이 제출되어 온 편이다(진재문, 2001; 홍선미, 2004; 황미영·한상진, 2004 등).

그런데 지금까지 대다수의 자활 연구들은 참여자들에 대한 양적 접근에 기초하여 제도적 문제점을 평가한다든지 일반적인 사회복지 실천 모델과 연계시키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리하여 빈곤층의 사회적 배제 경로를 검토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들의 삶 속에서의 자활의 경험들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시도는 거의 없는 편이다. 이렇게 볼 때 양극화의 결과를 빈곤층의 생애과정에서 확인하는 질적 접근을 통해, 사회적 배제의 다양한 기제와 이에 대응하는 자활의 노력들을 포착할 필요가 크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자활사업이 빈곤층의 욕구에 근거한 사회적 통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사회적 배제의 경험들을 다차원적으로 해석함과 아울러 이들의 일상생활에서 인지되는 자활의 지향들을 제도의 틀안으로 적극 끌어들이야 하는 것이다.

1997년 말의 IMF 사태 이후 한국 사회의 빈곤양상 변화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고용조정과 실업 확산에 따른 중산층의 빈곤화와 ‘복지 오리엔탈리즘(welfare orientalism)’(Goodman et al., 1998)의 기초 아래 국가 대신 복지기능을 담당해 온 가족의 해체 및 약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물질적 결핍이라는 과거의 협소한 빈곤 규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리 등의 복합적 결핍을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탈빈곤의 전략 또한 이와 같은 다차원적

1) 최근에 유럽 학자들 중에는 사회적 배제의 개념이 사회의 핵심에 속한 것을 주변적인 것으로 위치지우며 빈곤을 병리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이 용어 대신에 예방적 조치의 필요성이 담긴 좀 더 포괄적인 단어인 ‘불안정성(precarity)’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Chamberlayne, 2002: 270). Murard(2002)에 의하면, 사회적 배제 개념은 빈곤을 야기시키는 주체를 적시하여 자본가계급에게 죄의식과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반면에, 빈곤의 다원성에 주목함으로써 그들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사회적 배제의 접근방식은 누가, 또는 무엇이 배제시키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 줌으로써, 빈곤층의 생활과정에 개입되는 사회구조적 요소를 판별할 수 있게 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대안 모색을 풍부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다.

결핍에 처해 있는 빈곤층 개개인에 대한 총체적이고도 인성화된(personalized) 대응을 요구받아 왔다. 이 글에서는 빈곤층의 생애과정에 관한 질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빈곤층 개인의 사회적 배제의 과정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활의 여러 측면들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글은 울산 동구의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빈곤층의 생활 경험을 통해 이들의 사회적 배제 과정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활의 경험들을 정책·제도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식별함으로써 사회정책에 대한 함의들을 모아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연구방법을 설명하고 자료의 성격에 관해 밝힌다. 다음으로 본문에 앞선 예비적 고찰로서 사회적 배제에 대응한 자활의 차원들과 실제 자활제도의 현황을 살핀 다음,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전기의 구성 전략을 제시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이들의 생애과정에 사회적 배제의 특성과 이에 대처하는 자활의 측면들이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를 서술하고, 이와 같은 해석에 근거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것이다.

## II. 연구방법과 자료

### 1. 생애과정에 대한 질적 접근

사회과학에서의 질적 접근은 20세기 초 미국 시카고학파에 의해 제기된 이후,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의 관점에서 이론적 구성체에 대한 귀납적 방법을 강조하는 근거이론(grounded theory)으로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Dex, 1991: 9). Glaser—Strauss가 1960년대에 개발한 근거이론은 경험적 자료에 근거한 이론화를 지향해 왔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이 방법은 개념-지표분석 모형을 구축한 다음, 개념을 구술된 행동이나 사건이라는 경험적인 지표에 의해 지속적으로 비교하면서 이론을 형성해 나가는 전략이다(신경림 외, 2003: 72~75).

한편 최근에는 이와 같은 구조주의적이고도 귀납적인 근거이론 접근 외에도, 개별 사례가 갖는 역사적 국면의 독특한 성격에 초점을 두는 생애과정 연구방법들이 꾸준히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들은 서로 다른 다양한 사례들을 공

통된 초역사적 유형에 복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들 사례에 대한 역사적·문화적으로 특정하고 차별화된 해석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Wengraf, 2002). 대표적으로 사회전기적 접근(sociobiographical approach)은 개인의 의식과 주관성을 포착하면서, 그러한 개인적 삶을 형성하는 객관적 제약조건에도 관심을 두는 질적 연구방법이다. 이 접근방법은 인간의 사회적 삶을 개인 행위와 제도적 통제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해하며, 일정한 시기에 일어난 사회변동의 복합적 차원을 집약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유용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sup>2)</sup>

즉 사회전기를 통한 생애과정의 접근은 사회적인 것(socio)을 역사화시켜, 초역사적 일반성의 개발이 아닌 이론의 부분적 재구성을 통한 초점 사례의 풍부한 이해를 과제로 삼는 것이다. 이 같은 해석학적 사례 재구성의 원리에 따르면, 전기의 구성과 의사소통 과정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전망들은 상호 관련된다. 개인이 과거의 각각의 모든 국면들을 구술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 경험에 대한 증거는 선별적일 수밖에 없다. 유관 적합한 국면들은 부적합한 국면들로부터 분리되고, 의사소통될 수 있는 국면들도 그렇지 못한 국면들과 분리된다. 부적합한 것으로부터 유관 적합한 국면을 선별하는 원리는 일반적 패턴을 따른다. 이 패턴은 현재 상황,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라는 지평에서 과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의사소통하는가에 대한 전망을 형성하게 된다.<sup>3)</sup>

이처럼 개인의 전기적 전략은 특정하게는 생애과정에서의 어려운 상황의 결과로서 이들의 인지와 반응들을 구조해 온 방식을 가리키는 부분적으로 의식적이며 부분적으로는 무의식적인 패턴이다. 사회전기적 접근의 가정은 어려운 상황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대응될 수 있으며, 개인이 그것을 다루는 방법은 부분적으로는 상황 자체로부터 진화하며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종류의 상황에 대한 좀 더 일반적인 인지 및 행위 패턴에 각인되어 있다는 것이다.<sup>4)</sup>

- 
- 2) 지금까지의 질적 접근에서 빈곤층의 생애과정에 대한 관심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주요 대상으로 해 왔다. 그 첫째는 쇠퇴기의 경력과 같은 생애주기를 문제 삼는 것이고, 둘째는 일탈이나 운명에 대한 무기력증 등의 행태에 관한 것이고, 셋째는 국가에 의한 사회통제, 낙인, 차별의 형태로 존재하는 사회제도의 결과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Leisering et al., 1999).
  - 3) 이러한 관점에서 생애과정의 궤적은 출생부터 노년까지 개인 삶의 패턴을 대표하며, 가족, 학교, 직장,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개개인에 대한 독특한 사회화 효과들을 포함한다(Bynner et al., 2000).
  - 4) 이 접근에서 핵심적인 ‘살아온 생애(삶의 역사)’와 ‘삶의 이야기’ 간 분석적 구분은 텍스트와 실제 살아온 삶 간의 관계를 개념화시킨다. 이러한 이해에서 말해진 삶의 이야기 형

이 접근이 사회정책 측면에서 제공하는 이점은 사회적으로 배제된 개인이 그들의 ‘문제’에 의해 낙인찍히지도 않고 외부의 관점으로부터 규정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외부적’ 규정은 빈곤층을 희생양으로 만들거나 그들이 갖는 문제점을 외부인이 덜 중요하거나 심지어 사소하다고 고려하여 강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대신에 사회전기적 접근에서 피면접자는 스스로의 삶을 제시하고 하나의 특정 국면에서의 경험의 복합성(이혼, 실업 등)을 자신의 삶과 유관 적합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관련시키도록 격려 받게 된다.

지금까지 사회전기적 방법으로 생애과정에 접근한 연구로는 유럽연합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사회경제연구프로그램 4로 1996~99년에 유럽 7개국에서 진행된 ‘위험사회에서의 사회전략(Social Strategies in Risk Society; SOSTRIS)’이 대표적이다. SOSTRIS는 중퇴 청소년, 청년 실업자, 한부모, 조기퇴직자 등 다양한 사회집단 출신의 개인이 어떠한 근대 위험사회의 불확실성을 드러내는 지 서로 다른 전기 자료에 기초해 살피고 있다. 그리고 SOSTRIS는 생활세계와 사회정책을 재결합시키려는 의도 아래, 이들에 대해 인격 중심적이고 지역사회 통합적인 참여 전략을 펼치고 있는 사회적 기업 등의 혁신적 기관들도 주요 내용으로 포함시키고 있다(Chamberlayne, 2004, pp.21~23).

## 2. 자료의 성격

이 글에서 사용된 자료는 울산광역시 동구 자활후견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빈곤층 20 사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되었다. 면접은 생애과정에 대한 질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가변적 지침들에 의거하여, 2004년 6월 20일부터 7월 10일 사이 울산시 동구 자활후견기관 실무자 6인과 필자 2인 등 8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피면접자 20 사례의 성별·연령별 구성은 <표 1>과 같은데, 여성이 55%로 좀 더 많고, 연령층의 경우 30대 15%, 40대 35%, 50대 25%, 60대 이상 25%로 이루어져 있다.

---

태에서의 텍스트는 시간의 흐름에서 발생해 온 상황과 사건들에 관련되며 그것들의 자취를 남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과 사건들의 연속이라는 실재는 그들이 의사소통하는 모든 행동과 실제 상황에서의 모든 담화에서 그들이 얻는 의미의 산물이기도 하다. 오직 의미의 실제 생산을 설명하는 분석적 접근을 통해서만이 이러한 실재의 구축과 그 구성 및 수정의 원리에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Breckner and Rupp(2002) 참조.

〈표 1〉 피면접자의 성별 · 연령별 구성

	성 별	연 령
A	남성	30대
B	남성	30대
C	남성	60대
D	여성	40대
E	남성	50대
F	여성	60대
G	여성	40대
H	여성	40대
I	여성	30대
J	남성	60대
K	남성	60대
L	여성	40대
M	여성	40대
N	여성	50대
O	여성	50대
P	여성	50대
Q	남성	40대
R	남성	60대
S	남성	50대
T	여성	40대

### Ⅲ. 예비적 고찰

#### 1. 사회적 배제에 대응한 자활의 차원들

영국의 사회적 배제 유닛(Social Exclusion Unit, 1997)에 의하면, 사회적 배제는 개인 또는 지역이 실업, 저숙련, 저소득, 열악한 주거환경, 높은 범죄율, 낮은 건강수준, 가족붕괴 등 일련의 연관된 문제들을 겪는 상태로 정의되고 있다. 이 용어는 전통적인 빈곤 개념을 관계적 동학 속에서 재해석하며, 빈곤의 상황이 물질적 자원의 접근에서뿐만 아니라 권력을 둘러싼 사회관계, 주변화를

가져오는 문화적 과정에서 비롯됨을 보여준다(Hague et al., 2001). 이처럼 빈곤 문제를 사회적 배제라는 관점에서 다루는 의의는, 첫째 물질적 결핍과 아울러 정치적·사회문화적 차별이라는 다양한 차원들을 고려할 수 있고, 둘째 배제의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 집중하게 하며, 셋째 빈곤과 배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에 초점을 맞추게 함으로써 정책적·실천적 대안의 모색을 풍부하게 한다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sup>5)</sup>

사회적 배제의 원인과 관련된 서구의 논의들은 다음의 세 가지 흐름으로 모아지는 경향이 있다(Burchardt et al., 2002a). 첫째는 하류계급(underclass) 개념을 통해 빈곤층 개인의 행태와 도덕적 가치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둘째는 지구화, 자본주의 시장의 힘 등 체계의 역할을 강조하며, 셋째는 차별에 따른 권리보장의 결여 등과 관련시키는 경향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서로 다른 접근은 배제를 야기시키는 책임 소재에 대한 상이한 판단을 결과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첫 번째 입장에 의하면 사회적 배제의 책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가치관을 지닌 당사자에게 돌려지며, 두 번째 입장에 의할 경우 의도하지 않은 체계의 효과가 주범이 된다. 또 세 번째 입장에 따른 경우에는, 스스로 배제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의 결핍이 가장 큰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제의 기제들을 한국 사회에 적용해 본다면, 첫 번째 관점에서서는 IMF 사태 이후 발생된 장기실업자가 빈곤층으로 추가되면서 일자리와 탈빈곤의 전망을 갖지 못하는 이들 스스로의 무력감이 주된 문제로 드러날 것이다. 두 번째의 관점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조기퇴직, 한시적 근로의 측면을 부각시키며, 세 번째의 관점은 빈곤층의 사회 통합에 장애가 되는 국가정책이나 지역공동체의 조건 등에 중점을 둘 것이다. 또한 이를 한국 사회에서의 빈곤 원인에 좀 더 구체적으로 관련시키면 다음과 같은 정책·제도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차원들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정책·제도적 차원에서는 국가 복지체계로부터의 배제가 발생하며, 실

5) 이와 함께 사회적 배제 그 자체를 어떻게 경험적으로 식별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연구방법, 정책판단과 관련하여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Nolan et al.(1996)은 자활을 위한 자원의 결여는 차별, 만성 질환, 지리적 입지, 문화적 자기 동일시 등의 차원에서 조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Burchardt et al.(2002b)은 사회적 배제의 측정 수준들을 첫째 소득 또는 소비, 둘째 생산적 또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 셋째 집합적 의사결정에 대한 정치적 참여, 넷째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업대책과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부실, 노인·아동·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의 부재 등을 포괄한다. 다음으로 경제적 차원에서는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가 나타나는데, 이는 빈곤의 여성화, 남성 노동력의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분리, 고령화, 장애 및 폐질환 등의 과정을 포함한다. 끝으로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발견되는 교육 및 가정생활로부터의 배제는 전문적 교육 기회의 박탈과 아울러, 가족해체에 따른 정서적 결핍, 알코올에 대한 의존 등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위의 사회적 배제 과정들과 관련하여, 2000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다소 혼란스럽게 사용되어 온 자활의 범주들을 정책·제도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조작적으로 정의해 보도록 한다(한상진, 2004). 현재 자활의 의미는 정책적·제도적 차원에 국한되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이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라도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수급권에서 탈피할 경우 자활에 성공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자활의 용법은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에서의 공동체적 자조 활동이라든지,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노동능력 계발을 통한 자존감 향상 등의 측면을 간과하는 것이다. 그러한 문제의식 아래 자활의 세 측면들로서, 자족(self-sufficiency), 자조(self-help), 자주(self-empowerment)의 개념을 규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책·제도적 측면에서, 자활은 빈곤층이 더 이상 공공부조에 의존하지 않는 자족의 상태를 목표로 하는 노동의무의 부과이며, 이는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사업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족 수준의 자활 개념은 가구단위의 소득으로 최저생계비를 충족하는 상태를 가리키므로, 배버리지의 가부장적 규정에 국한되어 빈곤층 개개인의 자활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Gardiner, 2000). 따라서 가족부양이라는 소극적 의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통합을 가능케 하는 고용창출, 탈빈곤의 차원까지 포괄하려면, 가구단위의 자족 수준이 아닌 개인 단위나 공동체 단위의 또 다른 개념화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사회적 배제에 대응하는 사회적 통합의 맥락에서 자활을 스스로의 활동, 자기결정이라는 의미로 폭넓게 규정하며, 자활의 내용에 자족 외에도 경제적 차원에서의 자조, 사회문화적 차원에서의 자주라는 하위 범주들을 포함시키기로 한다.

자조 수준의 자활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이전에 1996년부터 설립된 자활지원센터의 이념과 비슷하며, 자활공동체라는 협동조합 형태의 영세기업 (micro-enterprise)의 창업을 꾀하는 현행 자활후견기관의 활동체계에서 발견되는 자활의 용법이다. 이러한 자조의 개념은 자족을 원칙으로 하는 노동연계복지 프로그램보다는 진일보한 지속적인 노동 통합의 목표를 갖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빈곤층을 복지에서 노동으로 내몰아 자족 수준의 일자리를 갖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지속가능한 자립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Long, 2001).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회적 배제의 기제에는 국가 복지체계의 불충분, 노동 시장에서의 퇴출 외에도 사회문화적 차별도 포함되기 때문에, 자족·자조에 못지않게 자주 수준의 자활도 중요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자주란,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에 대해 통제력을 행사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을 가리킨다. 위에서 언급한 자조를 위한 자활공동체 활동은 협동적 생산에 대한 참여를 통해 자주적 태도를 고양시키는 측면을 갖고 있다. 하지만 빈곤층 스스로 권리를 추구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주체로 발전되기 위한 자주의 초점이 견지되지 않는 한, 자족·자조 수준의 자활은 사회적 배제라는 구조적 압력에 근본적으로 맞서는 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 2. 자활제도의 현황

위에서 다룬 세 가지 자활의 범주 가운데 한국에서의 현실 자활제도가 가장 치중해 온 것은 자족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자활정책은 소득 중점적 목표를 갖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되어, 노동능력 있는 수급 빈곤층이 복지 의존성에서 벗어나 최저생계비 이상을 스스로 획득할 수 있게끔 노동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활근로에 의한 수입을 생계급여에서 공제하는 까닭에, 근로유인책이 미미한 상황에서 자활사업에 대한 참여도가 낮은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가능할 경우 생계급여는 물론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을 수 없는 통합급여 체계의 문제 등 자족의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미약한 형편이다(노대명 외, 2004).

한편 경제적 차원에서의 자조와 관련하여, 자활제도는 노동부의 직업적응훈련, 자활직업훈련, 자활취업촉진 등과 보건복지부의 자활근로, 자활공동체를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2>를 보면 자활사업 참여자의 대다수는 보건복지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노동부 프로그램 참여자는 전체의 4%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자조적 수준의 자활이 고용가능성의 향상을 통한 개인 취업보다는 집단적 노동경험을 통한 공동 창업을 주요 목표로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근로유지형이 가장 많기는 하나, 실제의 정책적 강조점은 사회적 일자리형, 시장진입형 자활근로를 통해 자활공동체 창업을 장려하는 데 두어지고 있다.

앞에서 제시된 세 가지의 자활 범주 중 실제 자활제도에서 가장 취약한 것은 자주적 수준의 자활이라고 보여진다. 수급 빈곤층의 인간관계 훈련이나 자활의 지 고취를 위해서는 전문 상담이 필수불가결한데, 현실적으로는 직업능력 판정을 위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초기 상담 외에 이러한 노력들이 발견되고 있지 않다. 더욱이 이들의 내방상담은 길어야 10~20분, 전화상담의 경우에는 5분 정도가 소요되어 극히 형식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전체 업무의 1/10 가량만 상담에 할애하고 있어, 조건 불이행이나 탈수급의 여부만을 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다(노대명·박찬임 외, 2004). 따라서 빈곤층의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을 제고시켜 자주성을 강화시키는 자활의 측면은 거의 무시되고 있는 셈이다.

<표 2> 자활사업의 참여자 구성(2004)

(단위: 명)

	총계	보건복지부							노동부
		소계	자활공동체/창업	자활근로			지역봉사 사회적응	공동작업장, 기타	
				시장진입형	사회적일자리형	근로유지형(지자체형)			
총계	52,619	50,642	1,926	5,001	12,506	26,345	3,017	1,847	1,977
누계 (1~9월)	85,726	81,176	2,662	8,921	19,528	41,604	5,067	3,394	4,550

자료: 장원봉(2005).

이렇게 볼 때 현재의 자활제도는 자족을 위한 노동의무 부과에 치중하면서, 주로 자활공동체 방식의 자조를 유도하고 있지만 상담 및 인간관계 훈련 등과 같은 자주적 측면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하다는 진단을 내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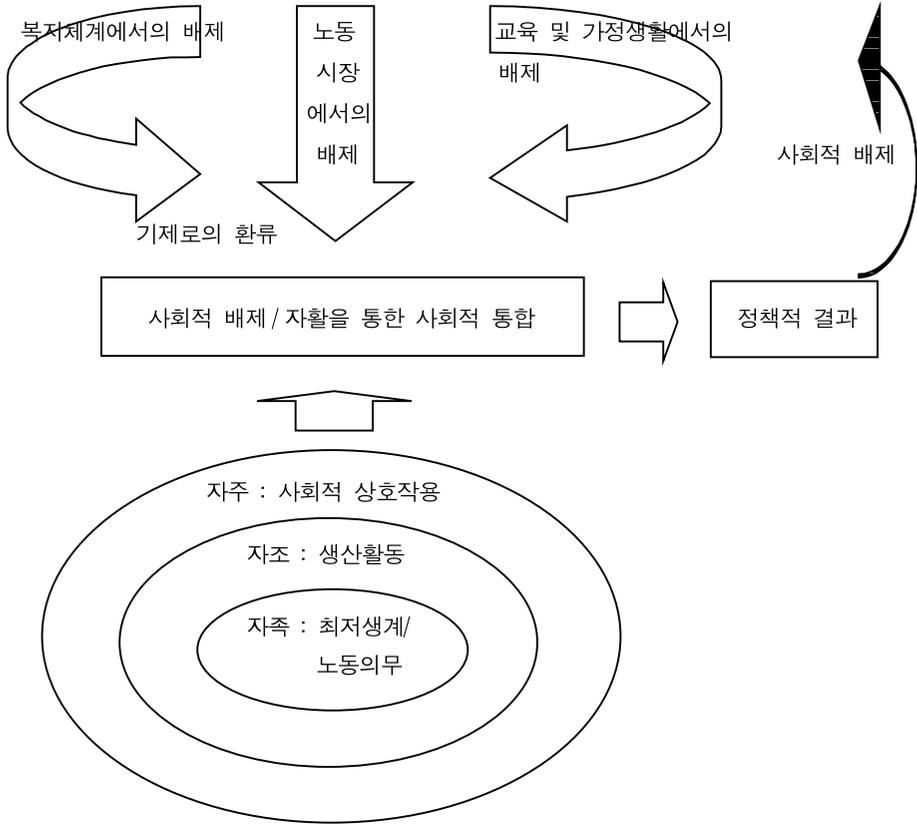
## IV. 분석 틀

지금까지 다룬 사회적 배제 및 자활의 차원들을 기초로 하여, 이 글의 분석 틀을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우선 빈곤층의 사회적 배제 계기들은 정책·제도적 차원에서의 복지체계로부터의 배제, 경제적 차원에서의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 사회문화적 차원에서의 교육 및 가정생활로부터의 배제로 설정된다. 뒤의 제V장의 제1절에서는 이 같은 세 가지 배제의 기제들이 빈곤층의 생애과정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기술하고 총괄적인 해석을 시도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사회적 통합의 노력인 자활의 범주들은 사회적 배제의 세 가지 차원에 조응하는 자족·자조·자주로 구성되며, 각각은 최저생계를 위한 노동의무 부과, 생산활동, 사회적 상호작용을 주요 측면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제V장의 제2절은 이와 같은 자활의 제도적 측면과 빈곤층의 삶에서 경험된 인지적 측면이 어떻게 서로 관계되는지를 서술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림 1]의 분석 틀에 기초하여 사회적 배제와 자활의 생애과정 각각을 해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평가하기 위한 전략적 쟁점들을 제시해 보겠다. 먼저 사회적 배제의 계기와 관련해서는, 위의 구성 틀에서 가정되고 있는 복지제도의 결핍, 노동시장에서의 퇴출, 제한된 교육기회 및 가족해체 등이 빈곤층의 삶에서 실제로 주된 문제로 경험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배제의 계기들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성 인지적 관점에서 주목해 보겠다. 예를 들어, 가족해체는 남성에게는 개인의 경력을 파괴시키는 부정적 사건일 수 있지만, 여성에게는 불만족스러운 가족상황에 대한 ‘해결책’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빈곤층이 겪는 자활 과정과 관련된 전략적 쟁점은 다음과 같다. [그림 1]의 분석 틀에 제시된 세 가지 범주의 자활제도는 각각 서로 다른 빈곤층에게

[그림 1] 빈곤층의 사회적 배제와 자활에 대한 분석 틀



항상 동일한 의미로 인지되며 동일한 과정으로 경험되고 있는가? 예컨대 자족에 의한 노동의무 부과가 빈곤층의 삶의 조건에서는 노동의욕 고취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자주적 측면에 대한 자활제도의 불비에도 불구하고 빈곤층 스스로가 자활후견기관에서의 일상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주성의 고양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의 자활제도는 자족을 위한 노동의무 부과, 자활공동체 방식의 자조, 자주성 제고에 대한 지원 부족 등으로 정리될 수 있는데, 이들 진단이 실제의 자활 대상인 빈곤층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자활경험과는 어떻게 일치 또는 불일치하는지를 해석하고자 한다.

## V. 사회적 배제와 자활의 생애과정

### 1. 사회적 배제의 계기들

#### 가. 복지체계의 결여

정책·제도적 차원에서의 배제는 2000년 이전의 한국 사회에서 서구적 의미의 복지 개입이 없었다는 점에서, 기초생활을 보장받지 못한 빈곤층 모두에게 공통된 경험이었다고 하겠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이후에도 장애나 질병에 대한 복지체계가 불비됨으로써 건강권에 대한 위협이 사회적 배제의 주된 계기로 경험되고 있다.<sup>6)</sup> 아래 두 남성 빈곤층들의 전기 가운데 <사례 1>은 장애를 갖고 있는 빈곤층에 대한 정부·기업의 제도적 배제를, <사례 2>는 의료서비스의 국가보장 결여로 인해 질병이 빈곤 탈출을 가로막는 상황을 나타낸다.

<사례 1:A씨> 대기업에 장애인 의무고용이 있는데 그걸 안 지키고 차라리 벌금을 내고 그러는 데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장애인이 됐지만 일반사람 못지않게 일 꼼꼼하게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잠시 나갔고요.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장애인들하고 1주일 교육을 받고요, 3주간의 실습을 해봤습니다. 일은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결국 안 써 주시더라구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서 무거운 거 나르고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약간 제가 뒤쳐지다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장애인이라고 안 써

6) 정책·제도적 배제는 좁은 의미로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정비된 상태에서 그 제도의 보호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는 이민자, 부랑자, 수급조건에 따른 예외자 등의 양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사회적 배제의 개념을 서구 복지국가 외에 한국과 같은 비복지국가에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좀 더 폭넓게 해석하여 복지제도의 불충분 자체도 정책·제도적 배제의 계기가 된다고 가정하고자 한다.

주네' 그런 생각만 했었지요.

<사례 2: C씨> 우리 집사람은 치매예요. 울주군에 재활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큰 종합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해보고 싶는데 돈이 없으니까, 큰 병원에 가서 확실한 병명을 알고 싶어 하는 데 돈이 없으니까, 정말 치매가 맞는가, 우울증이 맞는가, 이걸 알아야 하는데 확실한 거를 몰라요. 돈이 없어서 의사한테 진단을 한 번 못 받아 본 게 너무 원망스러워서, 돈이 없어서 자꾸 치이고 멧히니까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요. 그 때 1종이 돼서 동사무소에 복지과에 가서 '입장이 이렇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병원에 입원을 시키자' 그래서 재활병원에 갔어요. 거기 입원을 시키고 치료비 6만 3천원인데 2만원은 간식비라고 해서 8만 3천원 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2종이 되니까 대번에 32만원 나오더라구요. 거기 3개월치 냈거든요. 내고 나니까 먹고 살기가 참 고달프니다.

<사례 2>는 배우자인 여성에 대해 남성 가구주가 간병을 담당하는 특이한 경우인데, 가구원의 장애·질병시 돌봄의 역할은 여성에게 돌아가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사례 3>과 <사례 4>는 각각 장애아동, 병환 중인 남편과 자녀를 둔 여성의 전기에서 건강보장의 결함이 어떻게 정책·제도적 배제를 낳는지를 보여준다. 더 나아가 아동양육에 대한 전반적 복지체계의 결여 또한 여성 가구주에게 빈곤의 덫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사례 5>는 육아문제로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여성에 대한 것이다. 즉 노인 간병과 아동 양육이 여성에게 일임된 사회적 조건에서, 이들 서비스에 대한 국가 복지개입의 미비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사회적 배제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사례 3: I씨> 둘째 아이가 장애가 있어요. 선천적인 장애예요. 병원에서는 뇌성마비 같은 증세도 보인다고 그랬거든요. 크면서도 작년까지 언어치료 받고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 언어치료 교육을 하루에 40분씩 보육시설에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시설을 동구청이 불법이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못 받게 하더라구요. 동구청에서

그렇게 말하는 걸 이해는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떡해요. 우리는 당장 갈 데가 없잖아요. 화정복지관이라고 있기는 한데 그 때는 선생님 두 분이 계셨어요. 일주일에 두 번 하는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장애아들이 너무 많아서 다 소화를 못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 끝나고 1시쯤에 집에 오면 종일 혼자 있어요. 배고프면 과자 먹고 그렇게 하루 종일 있어요. 거기 교육을 보내면 혼자 집에 있어서 무섭지도 않고 배도 안 고플텐데. 경제적인 게 해결이 돼서 전에 언어치료 받았던 데 보내면 되는데 그런 지원이 안 되니까. 또 비싸잖아요? 특수교육시설이. 거기 보내는데 한 달에 25만원 들어요. 그런데 그것도 많이 싼 편이에요.

<사례 4: F씨> 아이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지 6년째 됐고.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안 다니려고 해서 선생님한테 좀 많이 맞고 했거든요. 그래서 애가 지금 정신이 안 좋아서 지금까지…… 정신지체는 아니고, 정신분열이에요…… 문소리만 나도 벌떡벌떡 뛰어나가고…… 저런 지 한 15년 됐어요. 도움은 국가에서 다 안 해줍니까? 아들 약도 제법 타다 먹고 쌀도 주고…… 도움이야 많이 필요하지만은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습니다. 우리 아저씨는 중풍으로 쓰러져서 약도 없어요. 애들 아버지 쓰러져서 중환자실 있을 때 돈 한 3,000만원 빚을 내서 그걸 혼자 벌 때 그게 진짜 너무 어려웠고, 그 때는 카든가 뭔가 그거 때문에 그 놈을 갚아야 될 때 계속 전화오고 너무 어려웠어요, 진짜. 환자들 때문에 이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례 5: I씨> 후견기관에 들어오기 전에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했었어요. 그 때는 엄마가 애들을 잠깐 봐줬거든요. 또 그 전에는 밤에 노래방에 주방일 가서 봐줬어요. 바쁘다고 연락이 오면 뜨문뜨문 가서 새벽에 일해주고 그랬어요. 애들이 친정에 있으니까 밤에 나와서 일하기도 좀 좋았죠. 근데 엄마 병이 악화돼서 애기를 데리고 오는 바람에 그 일을 그만두고, 애기가 어려서 일자리를 못 구했어요. 식당에는 토요일 일요일도 다 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자리도 못 구하고 계속 놀았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동사무소 가서 일을 구해달라고 했거든요. 일은 해야 되는데 나이가 있으니까 사무실에 취직도 안 되고, 그렇다고 식당에 갈려니까 얘기가 걸려서 얘기 봐줄 사람이 없어서 주말에 일도 못하고, 그렇다고 밤에 일하기도 그렇고, 일자리 좀 구해달라고 얘기하니까 여기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 나. 노동시장 이탈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는 자본주의 등장 이후 전통적으로 존재해 온 빈곤의 기제이지만, 특히 1997년 말의 IMF 사태가 사무직이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중간층의 주된 빈곤화 계기로 작용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사례 6>과 <사례 7>은 사무직·자영업 등에서의 퇴출로 빈곤층이 된 남성의 이야기인데, 둘 다 노동시장 이탈이 가족해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드러낸다. 한편 <사례 8>은 IMF 사태 이후 일자리 부족의 심화에 따라 불안정취업층에서 장기실직자로 전환된 남성을, <사례 9>는 남편의 실직 때문에 생계를 위해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된 여성을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이탈 효과를 성별로 볼 때, 경제적 부양의 책임을 더 많이 지는 남성에게 좀 더 뚜렷한 배제의 결과를 낳음을 알 수 있다.

<사례 6: E씨> IMF 1년 전에 자진해서 그만뒀거든요, 그때까지 부장으로 있다가. IMF 들어오고 1년 남짓 더 놀았어요. 그 때만 해도 40대 초반이라서 직장 구하기도 그렇고 해서 개인 사업을 시작했죠, 슈퍼를요. 슈퍼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좀 있다 슈퍼는 거의 집사람이 하고 내가 컴퓨터 계통 개인사업을 한다고…… 내가 한 개인사업에서 여태까지 계속 까먹은 거예요. 사업 실패 후 한 1년 반 정도 일자리가 없었어요. 일자리가 없었던 이유는 사업실패하고 막노동 해보려고 하니까 한 달에 며칠 정도…… 일주일도 못해요. 작년 같은 경우도 막노동도 일자리가 없더라고요. 집사람 가출하고는 애들하고 우선 먹고 살려고 막노동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용돈도 안 되고.

<사례 7: A씨> 1997년도에 부인하고 과일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 실패하고 난 뒤에 특별히 일도 안 잡히고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고 해서 그 이후에 특별한 일도 없이 방황했지요. 부인하고 이혼하게 되면서 방황을 많이 했고 거의 놀았다고 보면 되죠. 생활비는 집에서 어머니한테 도움을 조금 받았고 친구들한테도 도움을 많이 받았죠. 어머니한테는 많이 받은 것도 아니구요. 정말 어려울 때 돈 좀 부쳐달라고 해서 도움을 받았고 부산 친구 집에 좀 오래 머물렀죠.

<사례 8: J씨> 1999년도부터 2003년 8월까지 직장이 없었어요. 5년 정도 직장이 없었고, 그동안은 한 번씩 일거리 있으면 가서 일하고 했죠. 인력산업 사무실에 가도, 먼저 온 사람들 먼저 일하러 가고, 또 사무실에 아는 사람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일하러 가고 그래서, 일도 없이 사무실에 나갔다가 들어오고 계속 그랬어요. 불경기 때문에…… 또 내가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사례 9: L씨> IMF 이후에 우리 아저씨도 실직하고 취직도 계속 안 되고 해서, 제가 이력서를 20군데도 더 넘게 넣었는데 아무데서도 연락이 없더라구요. 그러다가 방어진으로 가면 좀 나올 거 같다 해서 이쪽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왔는데도 여기도 여전히 취직이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 때 식당에서 설거지했어요. 당시 70만원 받으면서 일했어요. 충분하지는 않았는데 좀 쪼들려 가면서 대출도 내고 생활했죠. 하지만 그 일도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나왔어요. 식당은 오래 다니니까 골병 들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곳저곳 식당을 오고가며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 다. 제한된 교육기회와 가족해체

사회문화적 차원의 배제는 배우자 가출, 별거, 이혼 등에 따른 가족해체와 충분한 교육기회로부터의 소외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한국 사회에서 유일한 계층 상승의 수단이라 할 수 있는 ‘고학력’ 기회로부터의 배제는 빈곤의 세습을 가져오는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사례 10>은 빈곤층에게

제한된 교육기회가 어떻게 가난의 대물림으로 이어지는가를 보여준다.

<사례 10:H씨> 강원도 신림이라는 산골에서 자라나 초등학교까지 다녔고, 할머니한테서 컸어요. 할머니가 맏손녀라고 예뻐하셔서 데리고 있었어요. 거기서 살면서 호강하면서 컸어요. 6남매 중에 맏이었고요. 부모님은 동생들 데리고 서울에 계셨어요. 아버지는 용접일 하셨고, 어머니는 가사일 보셨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갔는데 아버지가 딸이라고 학교를 가면 안 된대요. 그래서 1년을 울면서 진짜 회사에 다녔어요. 남대문에 신세계백화점 들어가는 바지공장에 미싱하는 데죠. 열심히 일하니까 첫 월급이 6,000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달에 일 잘한다고 9,000원으로 올려주고요. 시골에 있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일 다니는 건 힘들었는데 재미는 있었어요.

앞서 검토한 <사례 6>, <사례 7>을 보면, 노동시장에서 이탈된 남성이 가족해체로 인해 중첩된 배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사례 11>, <사례 12>, <사례 13>의 빈곤층 여성은 가족해체를 오히려 불만족스러운 가족 상황에 대한 해결의 계기로 받아들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이혼이나 별거 이후 빈곤층 여성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해서 그것이 사회적 배제에 대한 유일하거나 바람직한 해결이라고 예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초반의 한국 사회에서 적어도 빈곤층에게는 가부장제의 족쇄가 느슨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가족해체가 빈곤층 남성에게는 부가적 고통으로 경험되는 반면에 일부 빈곤층 여성에게는 종종 사회문화적 배제의 원인 제공자인 남성 배우자로부터 해방되는 계기로 해석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례 11:I씨> 애들 데리고 이혼하고 혼자 살면 그렇더라구요. 내 팔자가 그런데 그런 사람밖에 더 만나겠나 싶은 게, 어차피 그렇게 살 바에야 저 사람이 무슨 속을 썩이든지 애들 아빠 없는 애들 안 만들고 그냥 나 하나만 참으면 된다, 그러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밖에 여자가 있으니까 돈이 들잖아요. 집에 돈도 안 주고 안 들어오고 그러면서 집에 아예 신경을

안 쓰더라구요. 제가 이혼을 한 거는 바람기도 그렇지만 가정 소중한 줄 모르고, 자식 귀한 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트러블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구요. ‘외동에 외아들인데 아들이 있으면 안 그럴 거다. 딸만 있어서 그런다.’ 그래서 아들 있으면 괜찮아질까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래도 변함없더라구요. 어차피 애들하고 저하고 우리끼리 살았거든요. 형식적으로 있기는 했지만 오히려 우리끼리 살 때가 더 편하더라구요. 그래서 거의 별거는 계속하고 있었는데 서류정리는 뒤늦게 하게 된 거예요.

<사례 12: D씨> 이혼은 아니고 별거 중입니다. 사채업자들에게 빚도 있고 둘이 맨날 너무 좀 그래요. 나는 진짜 솔직한 심정에서는 이혼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업 망하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구박당한 거 생각하면... ... 만사에 무슨 말을 한 마디만 해도 뭐 잘못된 게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싸움이 돼요. 냉장고 열었을 때 점심때 먹은 반찬이잖아요. 저녁때 또 먹으려고 아까워서 그냥 두잖아요. ‘음식을 하면서 왜 그때그때 먹게 하지 왜 남기나?’고 그런 잔소리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지쳐서 잠깐만 누우면 미치겠는 거야.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럼 그 때부터 또 시작이에요. 욕을 말도 못하게 했고, 입으로다 폭력을 많이 행사했어요. 지금은 연락을 안 하고 살고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게 일할 수 있고, 정말 행복합니다.

<사례 13: M씨> 남편이 있었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아이들한테도 해꼬지하고 해서 제가 내쫓았습니다. 그때가 제가 만화가게 할 때였는데, 그 사람은 만화가게는 운영 못 하겠다 그러고, 그러면 내가 애들 데리고 나가겠다고 하니깐 본인이 나가겠다고 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11년 동안 제가 혼자 애들 키웠습니다. 생활비 하나 안 받고..... 식당 주방에서도 일하고 다방에 주방도 보구요.

## 라. 해석과 정책적 함의

그러면 위의 사회적 배제의 계기에 대한 전기 자료들을 사회구조적으로 해석한 다음, 그것의 정책적 함의들을 거두어 보겠다. 우선 복지체계, 노동시장, 교육 및 가정생활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의 배제는 울산지역 빈곤층의 삶을 통해서도 그대로 경험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장애 및 건강복지, 자녀양육을 둘러싼 복지체도의 결핍, IMF 이후의 일자리 부족에 따른 노동시장 이탈, 교육기회 불평등과 가족해체의 양상들이 위의 사례들에서 분명히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사회적 배제의 과정은 성별에 따라 빈곤층의 생애 여정에서 차별적으로 전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남성의 경우, 본인이 장애를 겪거나 여성 배우자가 질병을 앓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취약성에 따른 배제의 기제가 명확하게 발견되고 있지는 않다. 이에 비해 한국 사회의 성별 분업구조 속에서 실업이라는 노동시장에서의 퇴출은 가구의 주소득원인 남성에게 좀 더 뚜렷한 배제의 효과를 낳는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경제적 차원의 배제는 종종 가족해체에 따른 사회문화적 배제와 중첩되는데, 실직 남성에게 배우자 가출, 이혼이라는 가정생활에서의 배제 경험은 노동시장 복귀와 자활에로의 의욕을 상실케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

한편 아동양육, 노인 수발 등에 대한 국가의 사회보장이 미비한 조건에서, 가족 돌봄의 부담을 떠맡아야 하는 여성은 이와 같은 복지체계의 결여로부터 남성보다 더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이는 한부모 여성 가구주의 경우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이탈은 실직 남성 배우자를 대신하여 어쩔 수 없이 막노동을 해야 했던 사례를 제외하고는 여성들에게 중요한 배제의 경험으로 인지되고 있지는 않다. 그 이유는 빈곤여성의 경우 애초에 사무직이나 자영업 등 괜찮은 일자리에 종사하기보다는 단순노동이나 가계보조적 생산활동에 국한되어 있어서, IMF 사태 이후의 실업대란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웠기 때문으로 풀이될 수 있다. 끝으로 가족해체라는 사회문화적 차원은 일부의 빈곤층 여성들에게는 도리어 가부장제에 의한 배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작용됨으로써, 정책·제도적, 경제적 배제의 상황을 그나마 완화시키는 의미를 갖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처럼 성별에 따라 차별적인 사회적 배제의 해석들은 사회복지정책에 어떤 함의를 주는 것일까? 먼저 같은 빈곤층이라 하더라도 남성과 여성의 생애 궤적은 매우 다르며, 그에 따라 다양한 배제로부터의 영향과 이를 둘러싼 대처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가구만을 단위로 하는 빈곤 및 사회적 배제 대책은 한계가 명확하며, 성 인지적 관점에서 빈곤층 개인에 대한 여성정책과 남성정책을 별도로 수립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와 함께 가족해체가 남성과 여성에게 낳는 상반된 결과를 감안할 때, 빈곤층 남성에 대한 성 평등적 재교육과 가족가치의 내재화 노력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 2. 자활제도와 경험된 자활

여기서는 사회적 배제의 여러 과정들을 극복하기 위한 자활의 경험들을 가족·자조·자주의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특히 자활정책에 대한 제도적 평가와 관련하여, 빈곤층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자활은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가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 가. 가족의 측면

현행의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노동능력 있는 빈곤층에게 자활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제III장의 제2절에서 다룬 것처럼 자활급여는 수급권의 조건으로 노동에 대한 의무 차원에서 부과되는 데다가, 추가적 인센티브의 부족과 보충급여체제로 인해 일할 의욕을 감퇴시킨다고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사례 14>, <사례 15>, <사례 16>을 보면, 노동의무의 조건 부과에 대해 빈곤층들은 당연한 것이며 자립을 위한 기회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에 팽배한 노동윤리의 내재화에 따른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적어도 울산지역의 빈곤층은 서구에서처럼 복지 의존의 경향을 띠는 무기력계층이 아님을 보여준다. 한편 이에 비해 인센티브의 부족과 보충급여의 문제는 제도적 평가와 비슷하게 빈곤층에게도 부정적으로 인지

되고 있다(사례 17, 사례 18 참조).

<사례 14: Q씨> 국가가 조건없이 생계비를 지원해 줘도 저는 그냥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일을 해보니까 너무 보람이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 놀면 뭘해요. 이거 좋은 일이잖아요. 나와서 좋은 일 해보고 싶은 거죠. 그냥 놀고 있으니까 사람이 환장하겠더라고요. 이 일이 재미가 있어요. 크게 힘든 일도 아니고 사람이 움직여야겠더라고요. 집에서 쉬고 그러면 몸이 더 축나더라고요. 계속 움직여야지.

<사례 15: C씨> 놀고먹는 거는 싫고 어디든지 일자리가 있으면 저는 좋아해요. 몇십 만원 준다고 가만 앉아서 놀고먹고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 건 정말 대한민국에 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신 것 자기가 충실히 일을 하고 보답을 받는 게 좋은 방법이지, 거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얻어먹고 사는 걸 저는 정상적으로 안 봅니다. 어지간하면 활동을 해야지. 좋은 직장보다도 일을 하고 돈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장만 있으면 우리 나이에 행복한 거죠. 다른 거 뭐 있겠습니까? 꼭 자활사업이 아니어도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까.

<사례 16: A씨> 운동 삼아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른 일을 찾을 거라는 확신도 없고 이 특수 청소라는 것도 제가 배워 보니까요, 발전성 있는 일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 일로 제가 독립을 하는 것도 언젠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일도 청소 업종에서 꽤 낡은 기술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규칙적인 일도 하고 싶었고 열심히 해 보려고 왔는데 일을 해보니까 비전도 있어 보이고, 지금 다 배운 건 아니지만 제가 느껴보니까 일반업체에서 특수 청소 분야로 잘되는 곳도 많더라고요.

<사례 17: T씨> 큰 도움은 못 주는 거 같아요. 그래도 아쉬운 대로…… 별로

큰 도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돈을 못 벌 때를 생각하면 이것도 꽤 돈이 되는데 사람 욕심이 그렇잖아요. 십 원을 가지면 이십 원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듯이 이 정도 실비보조)보다는 더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월급에서 더 받으면 조금 더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게 큰 도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례 18: I씨> 생계비가 나오는데 일을 해서 월급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생계비에서 빼잖아요. 그게 일할 의욕을 잃게 하더라고요. 지난 1월에 쉼 때는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 동사무소에서 물어보더라고요.<sup>8)</sup> 일을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을 안 시켜 준 거잖아요. 쉬라고 해서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수입을 잡아야 한다고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게 없냐고 물으니까 그게 좀 황당하더라고요.

#### 나. 자조의 측면

다음으로 경제적 자조의 측면과 관련하여 자활사업의 생산활동에 대해서는 자활공동체 방식과 개인취업 방식을 둘러싼 입장을 검토해 보겠다. 현행 제도상 개인취업 방식의 노동부 자활사업은 정채 상태이기 때문에, 빈곤층이 선택할 수 있는 자활의 경로는 보건복지부에 의한 자활근로와 이를 통한 자활공동체 창업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현재 대다수의 자활공동체는 저임금과 수익성 부족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서구의 노동연계복지제도는 통상적으로 고용가능성 제고를 통한 개별적 노동시장 복귀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개인취업 방식에 대한 빈곤층의 욕구와 관점도 다양하게 포착할 필요가 있다.

<사례 19: E씨> 저는 여기서 같이 공동체 출범을 하는 게 오히려 부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이 할 수 있다고 판단이 서면 기술 습득을 해서 개인이

7)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빈곤층에게는 교통비와 점심값이 실비로 제공되는데, 울산 동구 자활후견기관의 경우 집에서 걸어다니거나 도시락 자활공동체에서 저렴하게 제공하는 점심을 먹기 때문에 생계비 보조 효과가 있다.

8) 매년 1월에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자활근로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제도랄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지금 여기 공동체 하시는 분도 제일 중요한 게 수입이라 보는데 조건부 수급자들 똑같이 힘든 상태고…… 오래 했어도 수입이 조건부 수급자나 차이가 없어요. 공동체가 발족을 해도 어느 정도 이윤이 하다못해 200만~300만원이라도 더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안 보거든요.

<사례 20:A씨> 저는 되도록 지금 하고 있는 이 일과 관련이 있는 일이라면 공동체로 나간다는지 개인적으로 일을 구한다는지 별로 상관 안 하겠는데요, 이 일하고 관련 안 되면서 간다는 자체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요, 굳이 돈을 훨씬 많이 준다고 하면 다른 쪽으로도 갈 수 있겠지만요, 그런 획기적인 제안이 아니고서는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례 21:N씨> 공동체로 되는 게 좋지요, 이 나이 먹어 갖고서. 젊은 사람들은 그냥 회사로 들어가는 게 낫겠지만 전문기술이 없어서 저는 개인 취업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자격증이나 있고 이러면 모르는데…… 특별한 기술 없는 우리 같은 사람은 여기서 같이 일하는 것이 낫지요. 또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면서 또 배우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서 느끼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요.

<사례 22:C씨> 공동체 자체만 5~6명이 일을 하면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와주고 밀어주고 해야 하니까 그렇지. 6~7명은 상당히 어려워요. 정말 고통스런 공동체를 만드는 거고, 여기서 수익을 만들려고 하면 밤, 낮으로 뛰어야 해요. 인원이 좀 많으면 성공할 수 있는 사례가 되겠더라고요. 다른 비슷한 회사에도 가서 아줌마들 임금을 물으니까 2만 5천원 일당제로 주더라고요. 거기도 보니까 일을 무지무지 열심히 해요. 여기도 사람만 많으면 10명 정도면 될 거 같은데, 여기는 인원이 적으니까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자조적 생산활동에 대한 빈곤층의 인식은 <사례 19>에서 <사례 22>까지 보듯이 현재의 자활공동체가 지니는 제도적 문제점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우선 <사례 19>는 보건복지부의 실적 채우기 요구에 의해 자활근로사업단과 다를 바 없는 자활공동체가 양산되는 상태에서는, 개인 취업에 의한 자조 노력이 좀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또한 <사례 20>은 자활사업으로 생산활동의 기술을 익히는 것이 핵심이지, 개인 취업과 공동체 창업의 선택은 빈곤층이 스스로 상황에 맞게 맡기어 두면 된다는 현 제도가 놓치고 있는 유연한 설계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례 21>은 기술도 없는 고령의 빈곤층에게는 개별 취업보다는 공동체 창업이 좀 더 현실적이라는 태도를 나타내며, <사례 22>의 경우에는 자활공동체 방향으로 가되 수익성을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지향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 다. 자주의 측면

마지막으로 자활제도에서 가장 미흡한 것으로 진단되고 있는 사회문화적 자주의 측면은 빈곤층에게는 어떻게 인지되고 있을까? 제Ⅲ장 제2절에서 다루었던 과도한 사례 부담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의 취약한 전문상담 서비스는 빈곤층에게도 불만 사항으로 경험되고 있다(사례 23 참조). 그러나 <사례 24>에서 <사례 26>까지 자활사업 참여 후 빈곤층의 삶의 태도 변화에 대한 전기를 보면, 자주성 제고를 위한 전문적 개입의 부실에도 불구하고 빈곤층끼리의 자발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심리적 안정과 생활의욕이 고취됨을 읽어낼 수 있다. 또한 <사례 27>, <사례 28>을 볼 때 재활용, 공공청소, 노인 돌봄 등의 자활 업종들이 지역사회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의의가 있어 자활 참여자들의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함을 알 수 있다.

<사례 23: G씨> 지금도 동사무소 가면 우리는 사실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일하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으니까 짜증도 날 거지만 너무 사무적으로 대하시는 것 같아요. 가끔 민망할 때도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서 얘기를 하면 차갑게 대하니까 그런 점도 있고.

<사례 24 : S씨> 아마 그거겠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잔다는 거. 규칙적인 생활을 얻었다는 거겠죠. 항상 대충대충 살 때는 잠도 제가 자고 싶으면 자고, 정해진 시간에 안 일어나다 보니까 완전 방탕한 생활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규칙적인 생활을 얻었고 봉급날이 생겨서 세금이라든지 그런 걸 제 스스로 낼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런 게 제일 크게 바뀌었다는 거죠. 많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소득도 생기고요. 그런 게 제일 많이 변화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례 25 : E씨> 애초에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이 파탄이 난 후로는 진짜 정신이 없었죠. 그러다가 막상 일자리도 없고, 애들 책임지고 혼자 살아가야겠다. 생각하니까 일자리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여기 나와서 일이라도 하니까 어느 정도라도 일단 먹고 살 수는 있고, 일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고…… 또 제가 예전에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시도 한 적이 있었는데…… 전의 자살 충동에 비해서는 지금이 더 안정적이죠.

<사례 26 : L씨> 이 일을 하고 나서 생활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돼서 변화가 있어요. 나와서 일하고 하니까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돈을 버니까 성격도 대담해진 거 같구요. 여기서 일하기 전에는 늘 집에서만 있었고 혼자서는 절대로 못 산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저씨도 좀 생각하는 게 변한 거 같구요. 그 전에는 우리 아저씨가 밖에 못 나가게 했거든요. 친구들이랑 술도 못 마시게 하고. 그런데 일을 하니까 아저씨도 조금씩 변한 거 같아요.

<사례 27 : B씨> 되살림공동체 같은 경우 동네에 돌고 있는 병이라든지 자루에 담아 놓은 병 같은 걸 수거해 오니까 아무래도 환경 쪽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고요. 다른 쪽은 모르겠는데 푸른마을공동체처럼 청소 사업은 공용 화장실이라든지 일회용 화장실에 어느 누가 가 봐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깨끗하고 청결하고, 거기 관리해 주고 그런 게 어느 지방에 누가 와도 동구의 이런 깨끗한 모습 보여주는 게 자랑 아니겠습니까? 전반적

으로 보람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례 28 : D씨> 전혀 몰랐던 소외된 노인분들 찾아볼 때 TV로만 보다가 제가 이런 데 나와서 일하니까 정말 자부심을 갖고 다니고, 나도 노후에 내가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걸 참 진짜 뭐랄까 너무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에 내가 나중예를 생각해서 할머니들 보면 더 잘해 드리고 싶어요. 너무 외로워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갔을 때 좋아하시는 그 모습이 좋잖아요. 내가 뭐 별로 잘난 것도 아닌데 내가 갔을 때 할머니들 반가워하실 때 뿌듯한 마음 그런 마음 느끼는 거 있죠.

#### 라. 해석과 정책적 함의

현재의 자활제도는 노동의무 부과를 기축으로 하는 가운데 공동체 창업을 통한 자립 지원에 집중하는 대신, 자주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은 거의 부재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자활정책이라는 한국형 노동연계복지체계는 정책·제도적 배제, 경제적 배제, 사회문화적 배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살폈듯이 빈곤층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는 자족·자조·자주의 측면들은 실제의 자활제도와는 일정한 괴리를 가지면서 밑으로부터의 자활의 가능성을 주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자족·자주·자주라는 세 가지 범주의 자활을 중심으로 제도적 차원과 빈곤층의 생활경험이 어떻게 일치·불일치하는지 정리함으로써, 관련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보도록 한다. 먼저 자족의 측면에서 노동능력 있는 수급권자에 대한 노동의무의 부과는 대다수의 빈곤층에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보다는 노동과 기술습득의 기회로서 긍정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지금까지 노동의무 부과를 둘러싸고는 자발성이 아니라 강제성에 기초하여 노동의욕을 감퇴시킨다는 제도적 평가(황미영·한상진, 2001 등)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반해, 실제의 자활 대상자는 의무적 참여라 하더라도 노동할 수 있는 기회를 의욕적으로 이용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사회적 배제에 대응하는 자활의 전략은 정책적 의도와 제도적 판단에만 의거할 것이 아니라,

빈곤층에 대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는 제도와 경험의 불일치까지 고려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자조의 측면에서 현재의 자활제도가 강조하고 있는 자활공동체를 통한 공동 창업의 방식은 생애경험에 대한 심층면접의 결과 저기술·저학력의 빈곤층에게 어느 정도 적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개인 취업을 원하는 경우까지 포용하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정책 설계가 요청됨을 알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노동부 자활프로그램의 실패에서 입증되었듯이, 개인 취업과 공동체 창업이라는 서로 다른 경로는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요될 것이 아니라 빈곤층 개개인의 상황과 욕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진다.

끝으로 자주의 측면에서는 전문 상담에 대한 제도적 불비에도 불구하고, 빈곤층 스스로가 자활사업을 통한 일상적 상호작용으로 자주성의 고양을 경험하는 또 다른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다중의 배제 상황에 처해 있는 빈곤층에게 자활은 최저생계의 충족이나 자조적 생산활동의 지향 이전에 사회적 배제로 인한 자주성의 상실을 치유하는 일차적인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 VI.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사회적 배제에 대응한 한국형 노동연계 복지프로그램으로 2000년 이후 도입된 자활사업의 경우,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 비해 빈곤층의 생애과정으로부터는 비교적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와 같은 발견이 한국의 자활사업이 갖는 제도적 한계를 용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족 차원의 결함들을 보완하면서 빈곤층의 자주적 인간관계를 지속시키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자조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울산지역 빈곤층의 자활에 대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해석은 ‘복지 의존층의

노동으로의 강제'가 강조되는 서구의 맥락과는 달리, 처음으로 주어지는 기초 생활보장과 결합된 자활노동의 의무 부과가 마땅한 대안적 일자리가 없는 현실에서 노동의욕과 생활의욕을 촉진시키는 '혜택'으로 수용된 탓이라고 여겨진다. 자활정책의 개선 방향과 관련해 볼 때, 이 같은 결과는 조건부 수급권이라는 노동의무 부과와 단절된 당장의 선진적 자활제도 설계보다는 자족의 요건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자조, 사회문화적 자주가 확보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체계화를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가구단위의 자족에 바탕을 두더라도, 성별·연령별 특성에 따른 개인단위의 자조 전략이 요청되며 이때 특히 빈곤층 여성이 겪는 정책·제도적, 가부장제적 배제라는 가중된 배제의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노동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자활 참여자에 의한 사회적 일자리가 질 낮은 서비스 제공의 우려를 제기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병, 재활용, 공공청소 등을 통한 지역사회 삶의 질 제고의 경험은 빈곤층의 자주성 고취에 긍정적인 것은 분명한 셈이다. 요컨대 앞으로의 자활프로그램은 개인의 생활 경험과 욕구를 반영하되, 빈곤층의 새로운 인간관계에서 생성되는 의도하지 않은 공동체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는 지역사회 통합의 일자리 창출 모델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남기철·성은미·유의선·황형욱. 『빈곤정책의 전환 모색- 사회적 배제를 넘어』. 진보정치연구소, 2005.
- 남춘호.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본 전주시 노동빈곤층의 형성과 재생산과정」. 한국산업사회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2006.
- 노대명·박찬임 외. 『자활정책·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노동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2004.
- 박병현·최선미. 「사회적 배제와 하층계급의 개념 고찰과 이들 개념들의 한국 빈곤정책에의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45 (2001): 185~219.

신경림 외. 『질적 연구 용어사전』. 현문사, 2003.

심창학. 「사회적 배제와 사회복지 정책적 접근」. 『상황과 복지』 19 (2004) : 13~54.

장원봉. 「사회적 경제의 대안적 의미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 논문 초고(미간행), 2005.

장원봉·정수남. 「근로빈곤층의 노동경험과 빈곤화에 관한 생애연구」. 한국사회학회, 후기 사회학대회 발표문, 2005.

진재문. 「자활사업의 이론적 쟁점에 대한 비판적 분석」. 『상황과 복지』 9 (2001) : 241~266.

한국도시연구소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본 빈곤층 실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4.

한상진. 「지구화, 공동체, 자활의 전략」.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도시연구』 5 (2) (2004) : 105~116.

홍선미. 「자활사업에서의 사례관리 적용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6 (2004) : 195~214.

황미영·한상진. 「빈곤층의 생산적 복지를 위한 자활지원센터의 역할」. 『지역사회복지운동』 8 (2000) : 139~148.

\_\_\_\_\_. 「부산지역 자활사업 참가자의 노동조건과 자립가능성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6 (1) (2004) : 129~154.

Burchardt, T. Le Grand J. and D. Piachaud. "Introduction." Hills, J. et al.(eds.), *Understanding Social Exclus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a).

\_\_\_\_\_. "Degrees of Exclusion: Developing a Dynamic, Multidimensional Measure." Hills, J. et al.(eds.). *Understanding Social Exclus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b).

Breckner, R., and S. Rup, "Discovering Biographies in Changing Social Worlds: the Biographical-interpretive Method." Chamberlayne, P. et al.(eds.). *Biography and Social Exclusion in Europe*. Bristol : The

- Policy Press, 2002.
- Bynner, J., and K. Silbereisen. "The Life Course and Social Change."  
Bynner, J. and Silbereisen, K.(eds.). *Adversity and Challenge in Life in the New Germany and in England*. London: Macmillan Press, 2000.
- Chamberlayne, P. "Conclusion: Social Transitions and Biographical Work."  
Chamberlayne, P. et al.(eds.). *Biography and Social Exclusion in Europe*. Bristol: The Policy Press, 2002.
- \_\_\_\_\_. "Biographical Methods and Social Policy in European Perspective."  
Chamberlayne, P. et al.(eds.). *Biographical Methods and Professional Practice*. Bristol: The Policy Press, 2004.
- Dex, S. "Introduction: Life and Work History Analysis." Dex, S.(ed). *Life and Work History Analysis: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Developments*. London: Routledge, 1991.
- Gardiner, J. "Rethinking Self-sufficiency: Employment, Families and Welfare."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24 (2000) : 671 ~ 689.
- Goodman, R. White, G., and S. Kwon. *The East Asian Welfare Model: Welfare Orientalism and the State*. London: Routledge, 1998.
- Hague, E, Thomas, C., and S. Williams. "Exclusive Visions? Representations of Family, Work and Gender in the Work of the British Social Exclusion Unit." *Gender, Place and Culture* 8 (1) (2001) : 73 ~ 82.
- Leisering, L. and Leibfried, S. *Time and Poverty in Western Welfare Stat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Long, D. A. "From Support to Self-sufficiency."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24 (4) (2001) : 389 ~ 408.
- Murard, N. "Guilty Victims: Social Exclusion in Contemporary France."  
Chamberlayne, P. et al.(eds.). *Biography and Social Exclusion in Europe*. Bristol: The Policy Press, 2002.
- Nolan, B. and Whelan, C. *Resources, Deprivation and Poverty*.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Social Exclusion Unit. *Social Exclusion Unit: Purposes, Work Priorities and Working Methods*. Cabinet Office, 1997.

Wengraf, T. “Historicising the ‘Socio’, Theory, and the Constant Comparative Method.” Chamberlayne, P. et al.(eds.). *Biography and Social Exclusion in Europe*. Bristol: The Policy Press, 2002.

abstract

---

## **The Social Exclusion and the Self-support of the Urban Poor in Ulsan Dong-Gu Region**

Sangjin Hahn · Yongsik Kim

This paper deals with the life courses to the urban poor in Ulsan region with respect to their experiences of the social exclusion and the self-support at the policy, economic and sociocultural dimensions. After explaining the research methods and the data collection, it examines both the dimensions of self-support(self-sufficiency, self-help, self-empowerment) for the confrontation with social exclusion processes and the self-support programs themselves. On the basis of the strategy for the construction of the urban poor's life experiences, this paper elucidat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exclusion and the aspects of the self-support in their life-journeys, from which derives the policy implications.

Keywords : social exclusion, self-support, Ulsan region, urban poor, life courses.